

'블랙리스트 7인방' 항소심 전원 유죄

조운선 법정구속·김기춘 형량 4년으로 늘어... 고법 "정부의 문화 차별대우는 전체주의"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의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게 항소심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운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김상률(5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 장광주(54) 전 문체부 1차관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소영(52)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법은 문화국가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양심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은 그동안 헌신적인 공직자나 존경받는 학자·법조인 등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나라와



3~4인 선거구로 확대하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이 23일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국회안 비리보는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3~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해 나서라"고 주장했다.

사회를 걱정했다"며 "하지만 이 사건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 배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대우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 권력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이 이같이 조직적·장기적으로 나선 것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 분야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문화를 차별대우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길은 퇴색되고 전체

적으로 흐른다"면서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 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몰랐다고 거짓 증언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한받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면서 "비판과 창작 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지원 배제 명단 등을 보고까지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지방자치발전추출범... 지방분권 본격 추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3일 출범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순은 부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정순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비전에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 등을 의결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범정부 재정분권TF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이양사업 관련 제정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원 등이다.

이날 출범식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게 된다. 핵심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현실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함께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조직을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분위원회와 각 분야별로 자치제도·재정분권·분권제도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지방대학협의회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를 비롯한 시·도와 시군구, 국회 및 정당, 학계·연구기관 등과도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를 힘차게 추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유원식 "2012년 대선 MB가 오염·훼손"

유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2012년 대선은 이명박 정부 정보기관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모씨가 18대 대선 당시 선거개입은 없었다고 한 것이 위증이라고 검찰에 자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을 더럽힌 행위는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할 현정질서 문란행위"라며 "위증을 지시한 원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이명박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민간인 댓글공작 사건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사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에서 불거져 이명박 정부로 확산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은 부패하고 타락한 보수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직원을 매수하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사용대상이 될 자격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에게 은밀히 전달했다는 의혹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패의 일상화가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대립 비판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을 색깔론 덧 씌우기 올림픽으로 만드는 한국당의 공세는 어처구니 없는 내로남불"이라며 한국당 정권 시절 남북 교류와 평창올림픽 지원특별법 등을 열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파리기계 분사와 가맹점 사례처럼 여력이 있는 부분에서 고봉 분담하고 양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며 "민주당은 최저임금 논란에 가려진 높은 임대로 부담 일방적인 비용전가 카드 수수료 등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도 힘을 싣겠다"고 했다. /뉴시스

청와대 "평양올림픽이란 딱지 이해할 수 없어"

청와대는 23일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라며 "여기에 '평양 올림픽'이라는 낡은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평창 올림픽=평양 올림픽'이라는 이념공세에 맞불을 놓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응원단도 왔으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지만 그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평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됐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의 경사"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계

인의 축재인 올림픽 성공을 바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계 올림픽을 준비해 온 강원도민, 평창·강릉 주민 2만여 자원봉사자, 그리고 선수단의 노고는 특별히 치하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다"며 "올림픽 성공은 고사하고 제대로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높았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 해소 노력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이어졌다"며 "평창 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앞당길 미중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화를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에 합의가 이뤄지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2011년 여야가 합의 처리한 평창올림픽특별법의 요지를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또 "동계올림픽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개최될 경우 동북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향하는 세계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2010년 여야가 합의 처리한 평창유치결의안 내용도 소개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라도 그 때 그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

보수 야당 이념공세에 맞불 "인천AG 때 평양AG라 안 불러"

서 참가하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자"며 "품격있는 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당당하게 맞이하자"고 제안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평창 올림픽 성공의 바탕이 차이와 차별을 넘어 평화 올림픽으로 가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00 젊은 층의 비판적 여론과 야당의 공세는 구분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핵심관계자는 "특별히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아니다"며 "올림픽의 본질이 유지되고 성공되도록 국민께 호소드리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았습니다.
-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후원금 사용내역	금액
01. 위익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천 지사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